

POLITICS & LAWS

ONE-NOTE



목차

민주 정치와 법

- i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 ii 법치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민주 정치 과정과 참여

- i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 ii 선거와 민주 정치
- iii 정당과 정치 참여

헌법의 기본 원리

- i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ii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iii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개인생활과 법

- i 민법의 기초
- ii 불법행위와 권리구제
- iii 생활 속의 법

사회생활과 법

- i 형법 및 범죄와 형벌
- ii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iii 사회법의 이해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 i 국제 사회와 행위 주체
- ii 국제법과 국제 분쟁

민주 정치와 법

i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의 의미 빈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함	•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 해결 및 조정 •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 좁은 의미의 정치 < 넓은 의미의 정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빈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
•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 • 소수 엘리트의 활동임을 강조 • 국가의 특수성(물리적 강제력 행사) • 국가 성립 이전 정치 현상 설명 불가	•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의 현상 • 국가와 다른 집단 간 차별성 간과

정치의 기능

- ㉠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 → 사회 질서 유지
- ㉡ 다양한 집단(시민)의 참여, 사회적 조건 개선과 비전 제시

정치의 성격

- ㉠ 양면성: 정치적 쟁점에 대해 대립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 ㉡ 권력성: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대립적 입장을 지배한다. (힘의 원리)
- ㉢ 정당성: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당화된다.

민주 정치의 의미

-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다수에 의한 지배

구분	일반적 형태	부작용
주권자 1인	군주정	참주정
주권자 소수	귀족정	과두정
주권자 다수	민주정	중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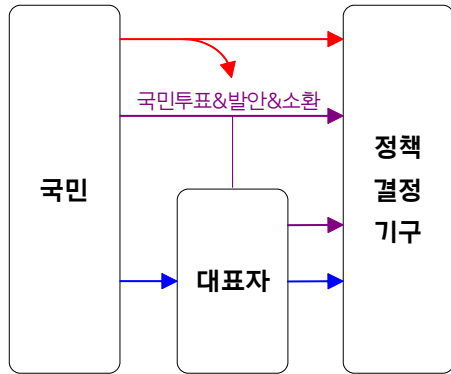
-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추구
- ㉢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대화, 토론, 양보, 타협, 설득 → 관용의 정신

MEMO



민주 정치 발전과 형태

민주 정치의 형태 출제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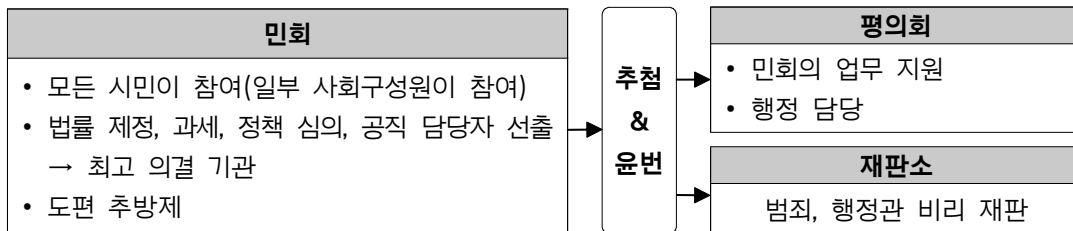
- ① (→) 직접 민주 정치: 자치의 원리에 충실
 ② (→) 간접 민주 정치: 정치적 무관심 발생
 ③ (→) 혼합 민주 정치: B+A의 요소

구분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장점	자치의 원리에 충실	시간, 비용 효율성
단점	- 비효율성 - 중우정치 가능성	- 의사 왜곡 - 정치적 무관심 - 엘리트주의

민주 정치의 발전 빈출

구분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정치 형태	직접 민주 정치 제한적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제한적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보통선거
시민의 범위	자유인, 성인 남성	부르주아	모든 사회구성원

①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 장군, 재정관 등은 전문성의 원리에 따라 선출됨.

② 근대 민주 정치

구분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의 독립혁명(1776)	프랑스 대혁명(1789)
원인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	영국의 식민지배	구제도의 모순
결과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인권선언문
의의	- 의회 정치 - 입헌군주제	- 민주 공화정 - 대통령제	- 자유, 평등의 강조 - 시민계급의 영향 확대

- 자유와 평등의 확산, 대의제 출현, 사회적 약자에의 관심↓, 제한적 민주정치

③ 현대 민주 정치

- 보통선거 확립, 대의제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 혼합, 전자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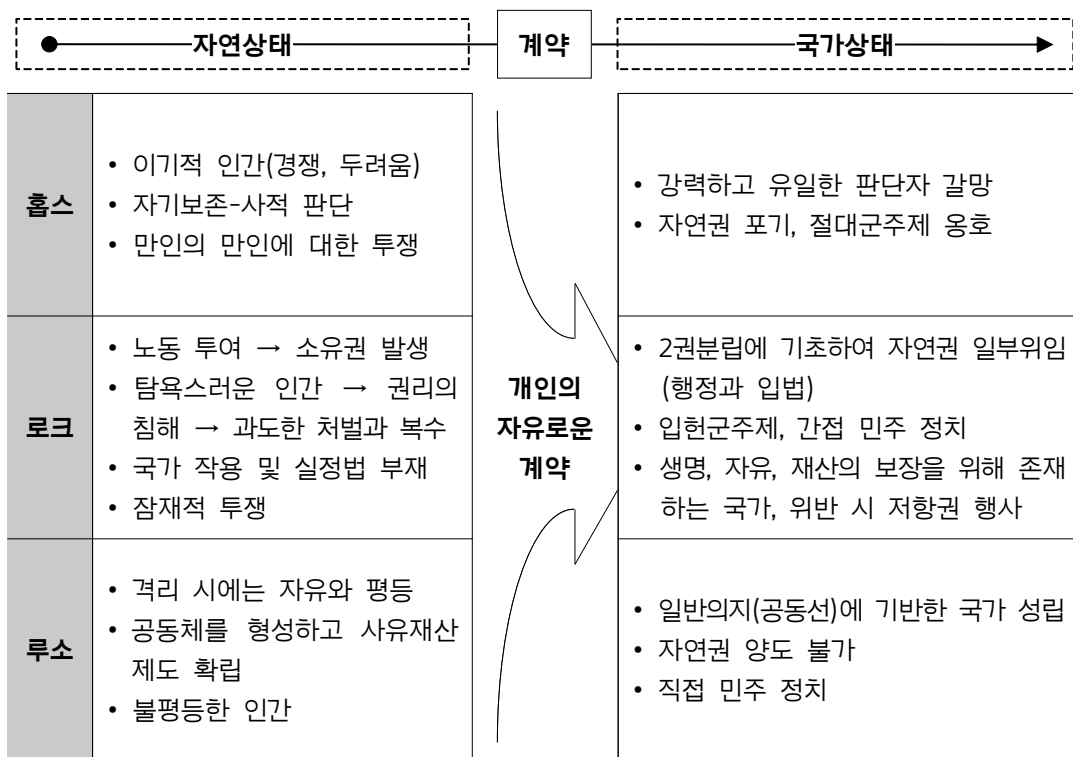


사회계약설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민주주의 원리	천부인권설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저항권 사상
- 국민주권 사상 - 입헌주의 사상 - 권력분립 사상	인간은 불가침의 권리를 타고남	- 국가 성립은 개인의 계약 - 국가는 수단에 불과	- 이성의 힘 강조 - 자유, 평등 자각	- 개인이 국가에 우선 - 불복종 가능

사회계약설 빈출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인간본성	성악설	백지설(불분명)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잠재적 투쟁	불평등, 쇠사슬 잔재
자연권 양도	전부 양도	신탁	양도 불가
주권 소재	군주주권	국민주권	국민주권
정치 체제	절대군주제(왕권신수설)	입헌군주제, 대의제	직접 민주 정치

MEMO

민주 정치와 법

ii

법치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의미와 유형 빈출

- ㉠ 법치주의의 의미: 인치(人治)가 아닌, 법의 지배 → 권력 제한과 기본권 보장
 ㉡ 법치주의의 유형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
- 합법적 절차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법에 근거) - 통치의 합법성 강조	형식적 합법성뿐 아니라 내용적 정의(실질적 정당성)도 충족해야 함.
독재 정치를 정당화	위헌법률 심판제 옹호
RULE BY LAW	RULE OF LAW
법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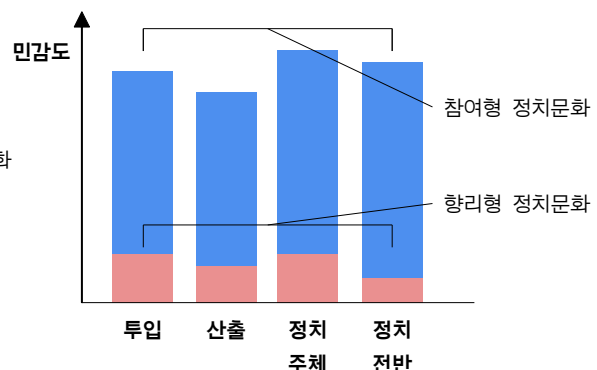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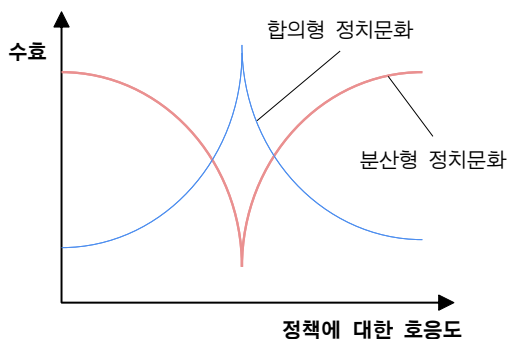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 특징: 제도와 의식의 불일치, 남북 이념의 대결과 경제적 빈곤 → 권위 정부
 ㉡ 정치 발전 과정(사건을 중심으로)

1948.8.15	정부 수립	
1960.4.19	4·19 혁명	3·15 부정선거 무효 시위 → 이승만 하야
1961.5.16	5·16 군사 정변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와 집권
1972.10.17	10월 유신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을 규정하는 개헌
1979.12.12	12·12 사태	10·26 사태 이후 청와대 입성한 신군부
1980.5.18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 독재와 권위주의에 대한 항거
1987.6.10	6월 민주 항쟁	대통령 직선제 요구 및 6·29 선언 쟁취

㉢ 문제점

- ㄱ. 학연, 지연 중시(연고주의)
 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만연
 ㄷ. 대화와 타협의 부재
 ㄹ. 향리형·분산형 정치문화(→ 참여형·합의형 정치문화를 조성해야 함.)



민주 정치 과정과 참여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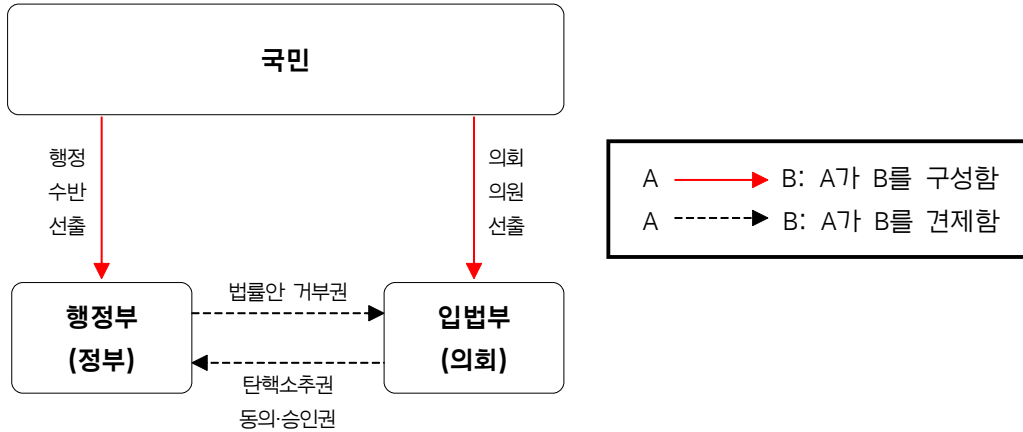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대통령제

대통령제 빈출

㉠ 형태



㉡ 세부

의미	-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 - 권력분립형 정부 형태	
	입법부	행정부
	의원과 각료의 겸직 불가능 의회의 각종 동의(사전)·승인(사후)권 탄핵소추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불인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
행정부 구성	-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 대통령의 지위=국가원수+행정부 수반	
정치적 책임	대통령과 입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여당과 야당

ㄱ. 대통령제에서 여당: 대통령 배출당

ㄴ. 대통령제에서 야당: 여당이 아닌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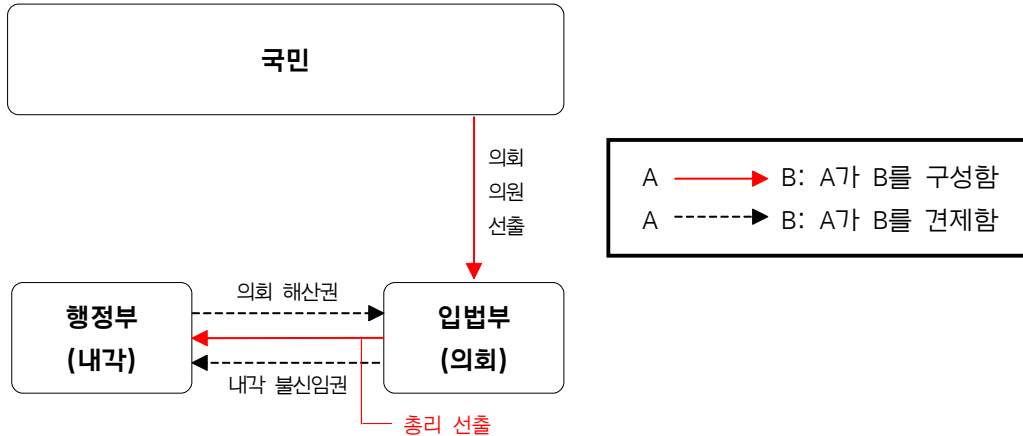
MEMO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빈출

㉠ 형태



㉡ 세부

의미와 특징	-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부 형태 -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	
	입법부	행정부
	- 의원과 각료의 겸직 가능 - 내각 불신임권	-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됨 -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의회 해산권
행정부 구성	- 의회 내 다수당(단독 또는 내각)에서 총리 선출 → 여소야대 정국 불가 - 행정부 수반: 총리(실권자) / 국가 원수: 국왕 또는 대통령	
정치적 책임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 여당과 야당

ㄱ. 의원내각제에서 여당: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ㄴ. 의원내각제에서 야당: 소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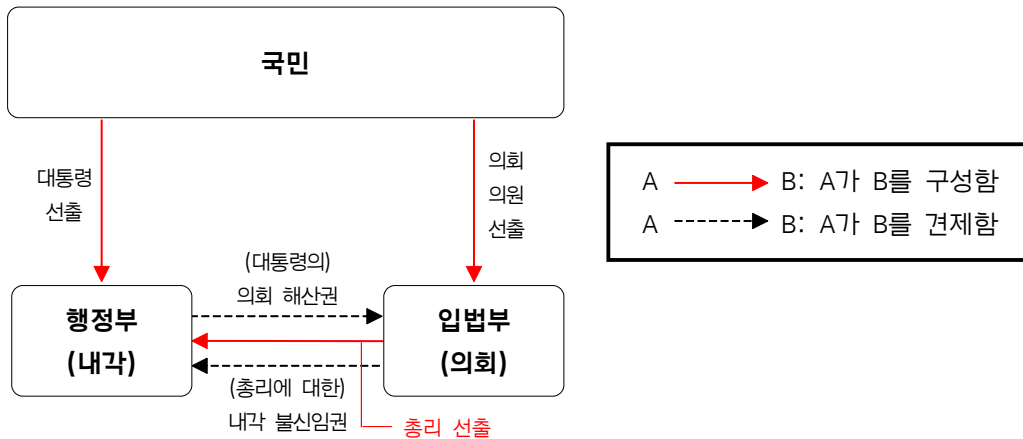
MEMO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

㉠ 형태



㉡ 세부

의미와 특징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절충된) 정부 형태 •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적 정부 형태	
	대통령	총리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외 담당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대내 담당
	의회 해산권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의회의 권한	• 전시(戰時)와 같이 비상시에는 강력한 대통령제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여대야소): 독재 가능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동거정부): 국정 혼란	
	• 내각 불신임권 인정 • 대통령 불신임권 불인정	

㉢ 여당과 야당

ㄱ. 이원집정부제에서 여당: 대통령 배출당

ㄴ. 이원집정부제에서 야당: 여당이 아닌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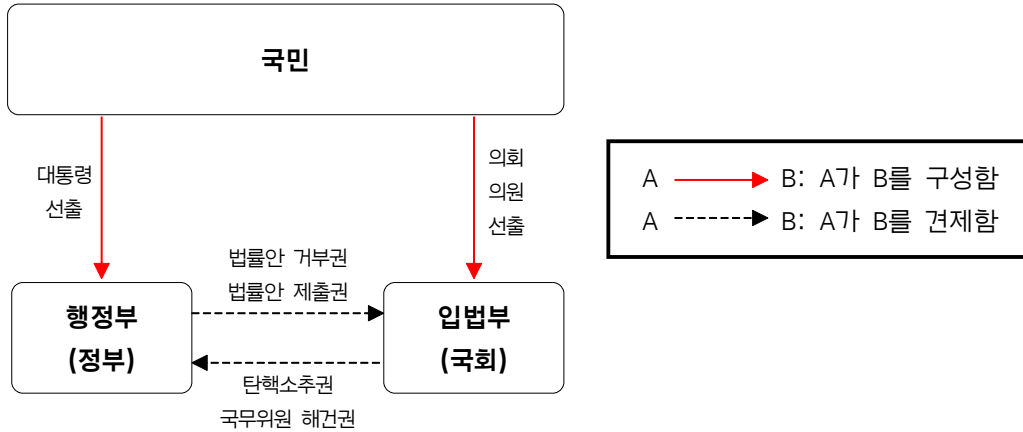
MEMO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출제요소

㉠ 형태



㉡ 세부

특징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의원집정부제)과는 다름.				
대통령제 요소	•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 • 대통령의 지위=행정부 수반+국가 원수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의회의 탄핵소추권				
의원내각제 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입법부</th><th>행정부</th></tr> </thead> <tbody> <tr> <td> •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td><td> •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td></tr> </tbody> </table>	입법부	행정부	•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입법부	행정부				
•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구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치적 책임	임기보장 → 국민적 요구에 둔감	국민적 요구에 민감, 책임 분명
의회-내각 관계	여소야대 시 조정 곤란	협력적, 능률적 운영
정국 안정도	임기보장 → 일관적인 정책 추구	연립내각 → 정국 혼란
다수당의 횡포	지속적인 견제 가능	단독내각 → 횡포 우려

민주 정치 과정과 참여

ii

선거와
민주 정치



선거의 의미

- ㉠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
- ㉡ 대의제하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 ㉢ 개별적 정치 참여의 방법

선거의 기능 출제요소

대표자 선출	대의제하에서 국정을 운영할 대표를 선출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선거를 통한 대표자 심판, 정치 권력 오남용을 견제
정치 권력에 정당성 부여	선거를 통해 획득한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
여론 반영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토대로 지지자 혹은 정당을 선택
주권의식 제고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
투입과 환류	대표자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고, 기존 정권을 선거를 통해 심판함.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출제요소

보통선거의 원칙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음.
평등선거의 원칙	모든 유권자가 등가치의 표를 행사해야 함.
직접선거의 원칙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함.
비밀선거의 원칙	유권자가 어느 후보 혹은 정당에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함.

MEMO



선거제도

선거제도 빈출

㉠ 선거구제도

구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의미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
장점	• 양당제 촉진 → 정국 안정 • 후보자 파악 용이 • 선거 관리 용이	• 다당제 촉진 → 다양한 민의 반영 • 사표가 적음. • 후보자 선택 폭이 넓음. • 전국적 유명한 인물에 유리, 연고주의 와해
단점	• 양당제 촉진 → 다수당의 횡포 • 사표가 많음. • 득표율≠의석률(과대 또는 과소대표) • 소수 정당, 신인 정치인의 의회 진출 불리 • 지역 명망가에 유리, 연고주의 촉진	• 다당제 촉진 → 군소정당 난립 • 후보자 파악 곤란 • 선거비용 증가 •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 →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

㉢ 대표 결정 방식

ㄱ.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최다 득표자 1인 → 당선	득표순으로 일정 수 → 당선
소선거구제와 결합	중·대선거구제와 결합
• 상대(단순) 다수대표제: 사표 대량 발생 • 절대 다수대표제(과반조건): 대표성 제고	-

ㄴ. 절대다수대표제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상위 2인에 대해서 재투표함.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 대해 선호도를 표시함. 1순위 개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호 순서를 반영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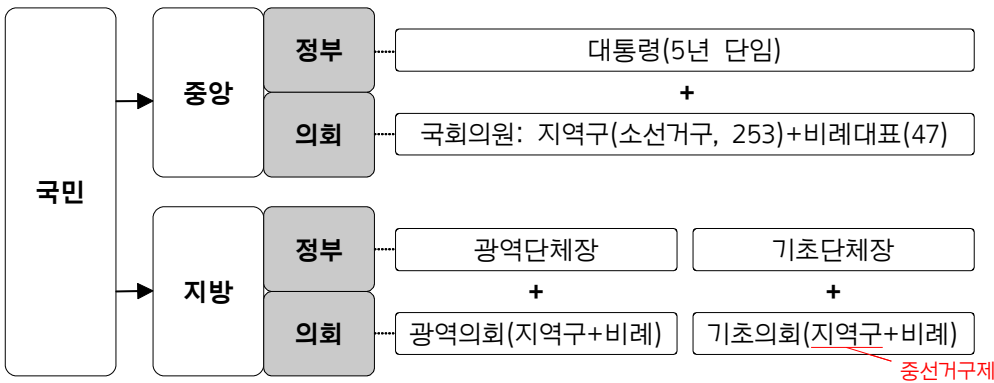
ㄷ. 비례대표제

배경	소선거구의 문제점: 사표 대량 생산(과대대표 또는 과소대표)
의미	(2019년 대한민국 기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장점	단점
선거비용 절감, 정당 중심 정치, 사표 최소화	군소정당 난립, 국민 아닌 정당의 대표, 절차 복잡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 ㉠ 중앙선거와 지방선거
- 중앙 정부 선거=지방 정부 선거 & 중앙 의회 선거=지방 의회 선거
 - cf)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ㄱ. 중앙선거

대통령 선거	• 전국 단위 5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 • 단순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선거	• 4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 • 지역구 의원: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의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ㄴ. 지방선거

구분		선거구제	선출방식	임기 몇 연임	비고
광역	광역자치단체장	-	다수대표	4년/3회 제한	-
	광역의회 의원	소선거구제	다수대표	4년/무제한	비례대표제 ○
기초	기초자치단체장	-	다수대표	4년/3회 제한	-
	기초의회 의원	중선거구제	소수대표	4년/무제한	비례대표제 ○

ㄷ. 교육감 선거: 광역단위 단순다수대표제 / 4년 및 3회 제한 / 공천 ×

MEMO

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배정받은 의석을 사전에 선관위에 제출한 비례대표의원명부에 따라 할당

장점	단점
직능대표적 성격 → 전문성 제고, 약자 배려	유권자가 당선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못함

㉞ 1인 2표 비례대표제

㉞. 1인 1표제의 문제점

예시로보기

1인 1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A국의 갑은 X당 지지자이다. 그러나 갑은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Y당의 후보 을이 제시한 공약이 탁월하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투표하였다. 결국 갑이 을에게 투표하면서 X당이 아닌 Y당이 갑의 표를 흡수하게 되었다.

→ 갑은 Y당에 직접 투표한 적이 없다. (직접선거 원칙 위배)

예시로보기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B국의 병은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의 공약이 지역 발전 도모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정에게 투표하였는데, 알고 보니 정은 무소속 후보였고 병은 의도치 않게 정당 투표에서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후보의 정당 소속 여부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다르다. (평등선거 원칙 위배)

㉞. 1인 2표제

등장 배경	[1인 1표제]의 문제점(직접선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
의미	지역구 지지 후보에게 한 표, 지지 정당에 한 표 행사

㉞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변천

시기	방식	분배조항	기타
11-14대	의석수에 따라 배분	-	-
15-16대	득표율에 따라 배분	지역구 5석 이상 점유 또는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	1인 1표제
17대 이후	득표율에 따라 배분	지역구 5석 이상 점유 또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	1인 2표제

MEMO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출제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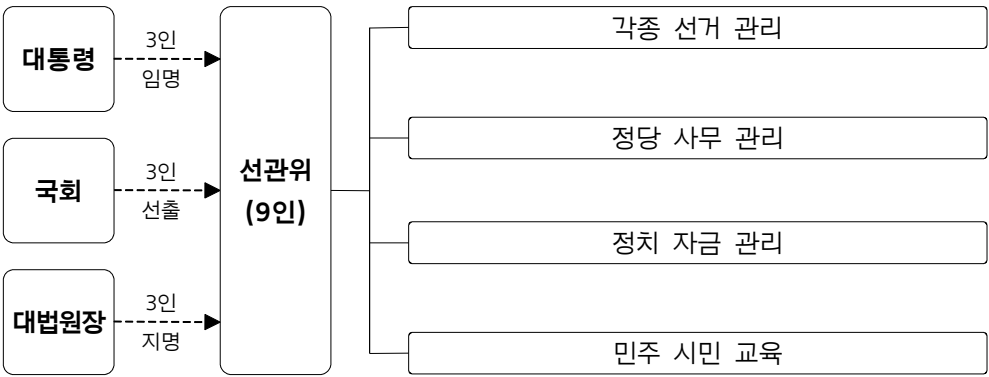
㉠ 선거구 법정주의

의미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
목적	게리맨더링(선거구의 자의적·인위적 획정) 방지
적용	- 인구 대표성: 인구비례 조절을 통한 표의 등가성 실현 - 지역 대표성: 도시, 농촌 등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 선거 공영제: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국가가 선거비용의 일부 부담

장점	단점
-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 과열 방지 - 선거 운동 비용의 국고 지원 → 유능한 후보의 정계 진출	- 국가 재정 부담 - 후보자 난립 가능

㉢ 선거 관리 위원회



ㄱ. 지위: 헌법상 독립 기관

ㄴ. 구성: 대통령 임명(3)+국회 선출(3)+대법원장 지명(3)=9명
→ 정치적 중립성

ㄷ. 선거 관리 위원장: 호선(상호선출)

MEMO

민주 정치 과정과 참여

ii

정당과
정치 참여



정당과 정당제도

정당 출제요소

- ㉠ 정당의 의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조직한 집단
- ㉡ 정당의 기능

정치적 총원 기능	공천 및 대표자 배출
정부 감시 기능	정부 정책 비판
정부와 의회의 매개 기능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 매개
여론 형성, 조직화 기능	국민의 의견을 조직, 수렴
정치 사회화 기능	공청회,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 증진

정당제도 빈출

단일정당제	복수정당제	
	양대정당제	다수정당제
- 민주적 정권 교체 불가능 - 경쟁, 비판, 견제 부재 - 다양한 의사 반영 불가능 - 비민주적, 독재 가능성	- 정국 안정 -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 강력한 정책 추진 용이	- 정국 불안정 - 정치적 책임 소재 불명확 - 강력한 정책 추진 곤란
	- 다양한 민의 반영 불가 - 다수당의 횡포 - 정당 간 대립 중재 곤란 - 정당 선택의 범위 좁음	- 다양한 민의 반영 용이 - 소수 의견 보호 - 정당 간 대립 중재 용이 - 정당 선택의 범위 넓음

- ㉠ 일당제(단일정당제): '정권획득 가능 정당'이 1개
- ㉡ 양당제(양대정당제): '대표적인 큰 정당'이 2개
- ㉢ 다당제(다수정당제): '경쟁 가능한 정당'이 3개 이상

MEMO



정치 참여

정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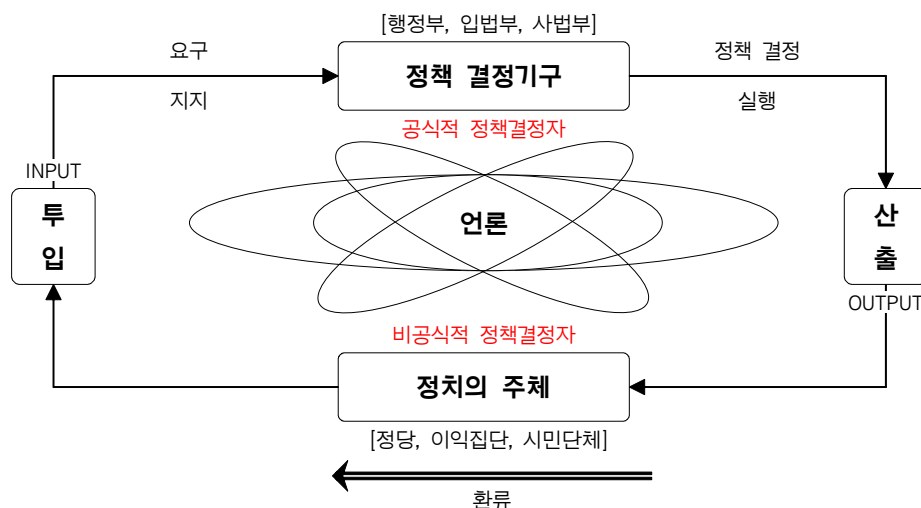
- ㉠ 정치 참여의 의미: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투입과 환류)
- ㉡ 참여의 의의와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참여의 의의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 주권의식 신장 - 시민의 이익 증진 - 대표자 감시·통제 - 대의제 보완	- 과두화, 시민 의사 무시 - 권력 남용, 부정부패 - 관객 민주 정치

㉢ 정치 참여의 유형

개별적 참여	선거, 공청회 참여, 국가 기관에 청원, 투고, 서명운동, SNS 활동...
집단적 참여	시위, 집회 참여,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 이스턴의 정치체계모형



MEMO

이익집단, 시민단체 빈출

구분	이익집단	시민단체
목적	사익(특수적 이익) 추구	공익(보편적 이익) 추구
관심 영역	좁음	넓음
예시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집단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인권단체
공통점	대의제의 한계 보완, 권력 감시 및 통제, 정치적 책임 ×, 정치사회화 기능	

㉠ 이익집단

ㄱ. 의미: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특수이익을 목적으로 조직한 집단

ㄴ. 특징: 정책 결정에 영향 행사(로비, 여론 조성...) → 압력단체

ㄷ. 등장 배경: 사회의 다원화·전문화·복잡화

의회	정당	행정부
지역대표제의 한계 → 직업적 이익 반영 곤란	과두제화 → 여론 수렴 기능 약화	행정 국가(전문)화 현상 → 정부와 경쟁할 조직 필요

ㄹ.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 다양한 정치 의사 표출(입법 독려) • 전문성의 제고 → 정당 보완 •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 정책 결정과 추진에 차질, 지연 • 공익과 충돌 •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

㉡ 시민단체

ㄱ. 의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ㄴ. 특징: 비영리성, 비정부성, 비당파성, 공익성 / 활동 영역 확대(정치 → 사회)

ㄷ. 한계: 국고보조금, 기업 후원에 의존 → 공공성, 독립성 약화 / 이익집단화

㉢ 집단적 정치 참여

구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공통점		• 집단적, 지속적, 비공식적 정치 참여 • 정치체계에서 투입과 환류 기능 • 정치사회화 기능, 여론의 형성·수렴·조직화	
차이점	목적	정권획득, 공익추구	사익추구 지역대표제와 대의제의 한계 보완
	관심 영역	넓음	좁음
	정치 총원 기능	○	×
	정치적 책임	○	×

MEMO

헌법의 기본 원리

i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의 기초

헌법의 기초

㉠ 헌법의 의미: 최고법, 근본법, 기본법, 국가의 최고 규범

고유적인 의미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 법	-	-
근대 입헌주의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 법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분립이 규정된 법	-
현대 복지국가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한 법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분립이 규정된 법	복지국가의 원리가 규정된 법

※ '국민의 기본권'은 특히 자유권을 가리킴.

㉡ 우리나라 헌법의 성격

ㄱ. 성문헌법(↔불문): 헌법의 형식을 갖추어 성문화됨.

ㄴ. 경성헌법(↔연성): 헌법 개정 절차가 까다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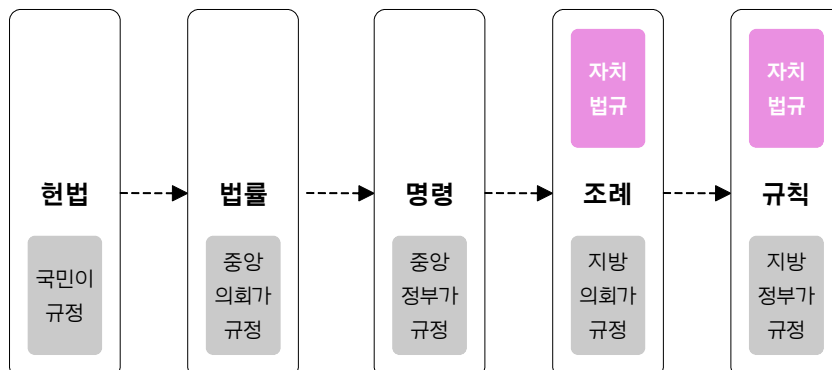
㉢ 입헌주의: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통치함.

근대 입헌주의		현대 입헌주의
• 개인의 자유 중시(소극적 국가) • 국가 권력 남용 방지 • 권력분립의 원리	[소극적 국가] → 빈부격차, 경제공황	• 국가의 적극적 개입 강조 • 국민의 기본적 생존 보장 •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자유주의적 입헌 질서		복지국가로서의 입헌 질서

㉣ 헌법의 의의

정치적 의의	법적 의의
• 국가의 창설 • 정치적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기준 제시 • 사회 통합 실현	• 최고 규범 • 조직 수권 규범(국가 기관에 권한 부여) • 권력 제한 규범(기본권 보장 규범)

㉤ 우리나라 법의 위계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빈출

구분	실현방안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선거제, 복수정당제, 참정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복수정당제, 상향식 의사 결정
복지국가원리	사회보장제도
국제평화주의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외국인의 지위 보장
평화통일지향	남·북한 교류 활성화
문화국가원리	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보장, 평생 교육 진흥, 의무교육제

㉠ 국민주권주의

의미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 의사 결정권(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헌법 규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현방안	• 참정권, 민주적 선거에 근거한 대의제 • 복수정당제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자유민주주의

의미	•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 민주주의: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함.
헌법 규정	전문 ...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4조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실현방안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MEMO

㉓ 복지국가원리

의미	•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함.
헌법 규정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행방안	• 사회권 보장 • 사회 보장 제도 실시

㉔ 국제평화주의

의미	•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
헌법 규정	전문 ...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실행방안	•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㉕ 평화통일지향

의미	•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
헌법 규정	전문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실행방안	•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㉖ 문화국가원리

의미	• 국가가 문화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헌법 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실행방안	• 평생 교육 진흥, 의무교육제 • 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보장

MEMO

헌법의 기본 원리

ii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의미, 성격,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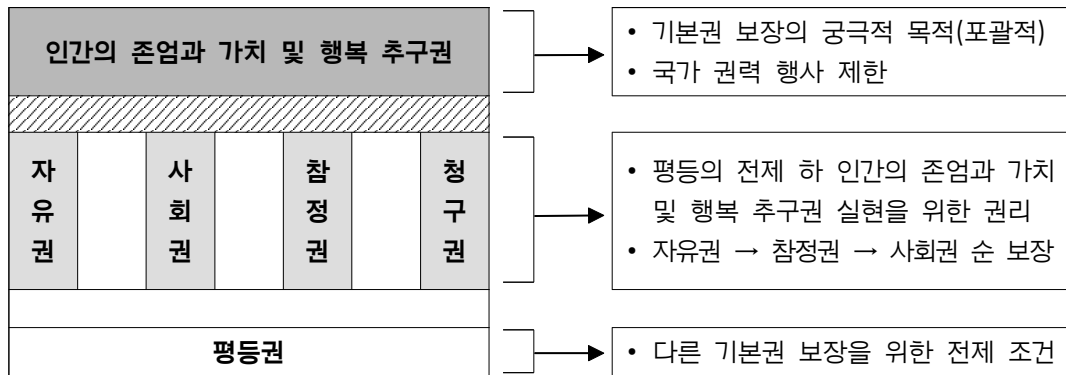
기본권의 의미

- ㉠ 인권: 초국가적, 천부적 권리
- ㉡ 기본권: 헌법에 규정되어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

기본권의 성격

- ㉠ 자연법상 권리: 불가침, 양도 불가능, 천부적[절대성 → 제한 ×]
- ㉡ 실정법상 권리: 명시적, 국가가 보장, 성문화[상대성 → 제한 ○]

기본권의 종류 빈출



㉠ 평등권

의미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														
성격	• 본질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 포괄적 권리: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음.														
내용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금지, 교육의 기회균등, 성평등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의미</th><th>활용</th><th>특징</th></tr> <tr> <td>형식적 평등</td><td>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td><td>정치적 영역</td><td>절대적·산술적 평등 평균적 정의</td></tr> <tr> <td>실질적 평등</td><td>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td><td>경제·사회적 영역</td><td>상대적·비례적 평등 배분적 정의</td></tr> </table>			구분	의미	활용	특징	형식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정치적 영역	절대적·산술적 평등 평균적 정의	실질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경제·사회적 영역	상대적·비례적 평등 배분적 정의
구분	의미	활용	특징												
형식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정치적 영역	절대적·산술적 평등 평균적 정의												
실질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경제·사회적 영역	상대적·비례적 평등 배분적 정의												

MEMO

㉞ 자유권

의미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시민혁명 이후 보장)		
성격	• 소극적·방어적 권리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역사적 권리, 포괄적 권리		
내용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묵비권, 영장제도, 구속적부심, 형벌부소급, 일사부재리, 연좌제 금지...	
	정신적 자유	양심·종교·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예술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사례로보기

인권위는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과 해군 학군 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 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㉟ 참정권

의미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성격	• 적극적·능동적 권리 • 국가에의 자유 • 열거적·개별적 권리: 헌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보장함.		
내용	선거권	국가 주요 기관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담임권	국가 및 공공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권리	
		피선거권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될 권리
		공직취임권	임명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권리
	국민투표권	헌법 개정, 국가 중요 사안과 관련된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	

사례로보기

국회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MEMO

㉔ 사회권

의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바이마르 헌법에 최초 규정)
성격	• 적극적, 현대적 권리 • 국가에 의한 자유 • 열거적·개별적 권리: 헌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보장함.
내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노동의 권리, 근로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 환경권

예시로보기

갑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옆에는 원래 공군 기지가 있었으나 최근 공군 기지가 사라지고 국제 공항이 들어왔다. 이후 여객기 취항 등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입게 된 갑은 기본권을 행사하여 해당 기관에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었다.

㉕ 청구권

의미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	
성격	• 수단적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절차적 권리, 적극적 권리 • 열거적·개별적 권리: 헌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보장함.	
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재판청구권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았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무자력이거나 검거되지 않았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예시로보기

갑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옆에는 원래 공군 기지가 있었으나 최근 공군 기지가 사라지고 국제 공항이 들어왔다. 이후 여객기 취항 등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입게 된 갑은 기본권을 행사하여 해당 기관에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었다.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의미	국가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부여된 일정한 책임
4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노동의 의무
헌법에 의무를 규정한 까닭	국가의 자의적 의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함

㉠ 고전적 의무(순수한 의무): 납세의 의무(조세법률주의),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는 성인 남성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짐.

㉡ 현대적 의무

교육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함. - 최소한의 교양과 능력을 갖추게 함(문화국가의 이념 실현)
노동의 의무	- 노동해야 할 의무(법적 강제력 ×) - 자신의 생존을 보존하며 국가 부의 증진에 기여
환경보전의 의무	환경을 오염하지 않을 의무, 공해 방지 시설을 할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타인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재산권 행사를 금지함. (사회신탁사상 반영)

※ 교육, 노동, 환경보전의 의무는 권리의 성격을 띠.

MEMO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출제요소

헌법 규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 기본권 제한의 요건

사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형식	법률로써		
	국가안전보장	형법 등에 의하여	
	질서유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공공복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방법적 요건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함.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함.	
	피해의 최소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제한해야 함.	
	법익의 균형성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 과잉 금지의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그 기본권 제한은 부당함.

㉢ 기본권 제한의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능

MEMO

헌법의 기본 원리

iii

국가 기관의 구성 및 기능



국회의 지위와 구성 출제요소

㉠ 국회의 지위

국정감시기관	국정 감시·견제
입법기관	법률 제정·개정
국민의 대표기관	대의제를 통해 국민주권 실현

㉡ 국회의 구성

의장단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				
본회의	- 국회의원 전원의 최종적 의사 결정, 재적 1/5 이상 참석으로 개회 - 국가기능이 확대되면서 처리할 안건 폭증. 비효율성·비전문성 증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최소 재적 200인, 단원제 국회 특권<table><tr><td>면책특권</td><td>국회 내 직무상 표결과 발언에 대한 책임 ×</td></tr><tr><td>불체포특권</td><td>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 ×(헌행범 제외)</td></tr></table>국회의 독립성, 자주성 보장	면책특권	국회 내 직무상 표결과 발언에 대한 책임 ×	불체포특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 ×(헌행범 제외)
면책특권	국회 내 직무상 표결과 발언에 대한 책임 ×				
불체포특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 ×(헌행범 제외)				
주요기관	<table><tr><td>위원회</td><td>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 심의, 상임위(16)+특별위</td></tr><tr><td>교섭단체</td><td>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모임으로 국회 진행 중 중요 안건 협의</td></tr></table>	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 심의, 상임위(16)+특별위	교섭단체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모임으로 국회 진행 중 중요 안건 협의
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 심의, 상임위(16)+특별위				
교섭단체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모임으로 국회 진행 중 중요 안건 협의				

㉢ 국회의 회의

㉢. 회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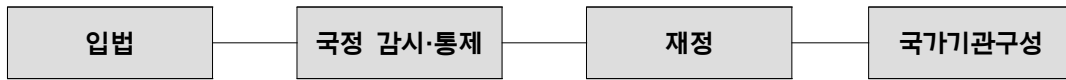
구분	정기회	임시회
개회 조건	매년 1회(9/1) 필수적 개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1/4 요구
회기	100일 이내	30일 이내
업무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
	법안 처리, 국정조사	

㉣. 회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여 민주성을 확보함.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함.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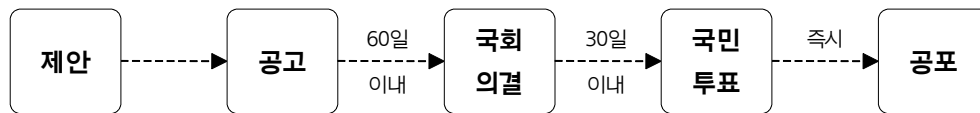
MEMO

국회의 기능과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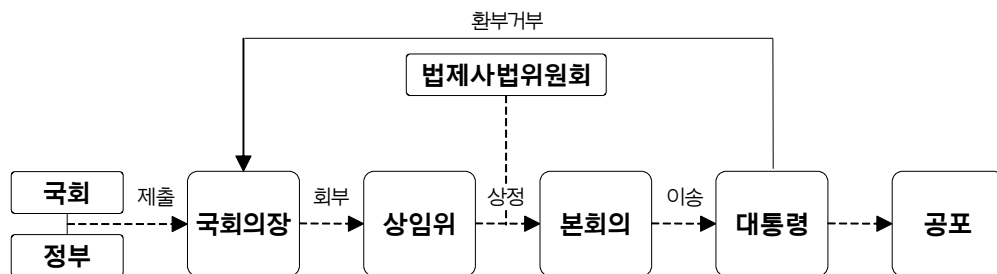
㉠ 입법 권한

7. 헌법 개정 절차



제안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
공고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
국회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공포	대통령이 공포

ㄴ. 법률 제·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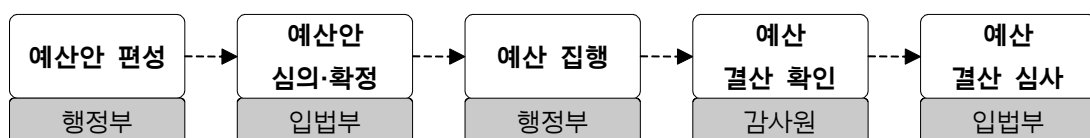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 10인 이상, 각종 위원회 및 정부
본회의 상정	상임위에서 구체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상정됨.
심의 의결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정부 이송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환부거부하여 재의 요구
재의결	재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가결 시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5일 초과시 국회의장 공포

⑥ 국가기관구성 권한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대통령 임명) 선출

㉔ 재정 권한: 조세법률주의,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권



㉔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

ㄱ.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국정감사	국정조사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 수행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특정사안에 대해 수행

ㄴ. 국정 수행에 대한 사전동의 및 사후승인권

동의권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일반 사면 등에 대한 사전동의
승인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과 긴급 명령 등에 대한 사후승인

ㄷ. 탄핵소추권 및 해임건의권

구분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행사 조건	직무상 위법 행위, 가결 시 권한 정지		정책 실패(정치적 책임 부과)
가결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의회주의의 위기

배경	해결방안
행정 국가화: 행정부 주도의 입법 활성화	입법부의 전문성 신장
정당 정치의 폐해: 민의 아닌 당론 반영한 입법	정당 민주화
정책 결정 주체의 다원화: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 활성화	-

MEMO



행정부와 대통령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출제요소

국무총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행정부 2인자) - 행정 각부 통할 -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 및 해임건의권, 총리령 발포
국무회의	-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의결 x, 구속력 x) - 의장(대통령), 부의장(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
행정 각부	- 장관의 지휘 하 소관 사무 집행, 부령 제정 -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감사원	- 대통령 직속 행정부 최고 감사 기관 - 헌법상 필수 기관(헌법기관), 독립적 기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빈. 또는 그 자리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과 그 통제 출제요소

㉠ 행정부 수반

-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국무회의 주재(의장)

㉡ 국가 원수

국가대표권	- 조약 체결 및 비준권 - 선전포고권
국가와 헌법 수호권	- 긴급 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 계엄 선포권 -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국정 조정권	- 입법: 임시회 소집 요구, 국회 출석 발언, 법률안 거부, 헌법 개정안 제안 - 사법: 사면권 - 국민투표부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위 3인 임명권

㉢ 대통령 권한 통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동의권과 승인권, 탄핵소추·해임건의권
법원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행정부 내부	국무회의 심의, 문서주의와 부서(공동 서명), 동의, 승인,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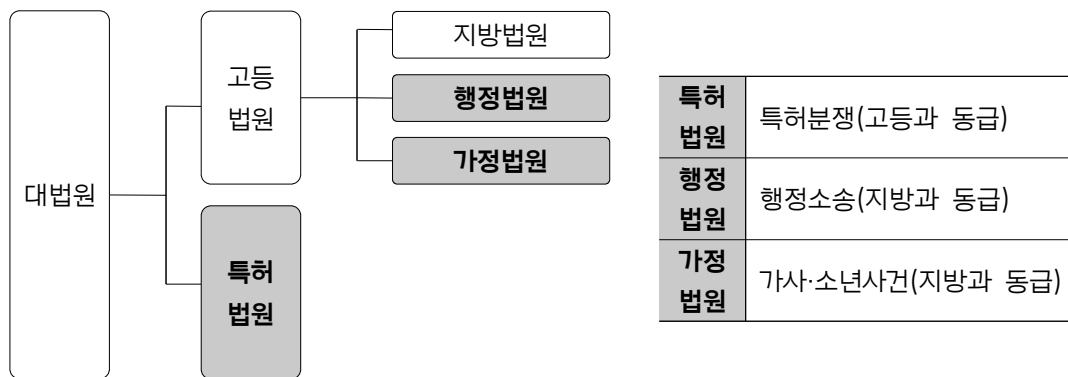
법원

사법권의 독립

- ㉠ 목적: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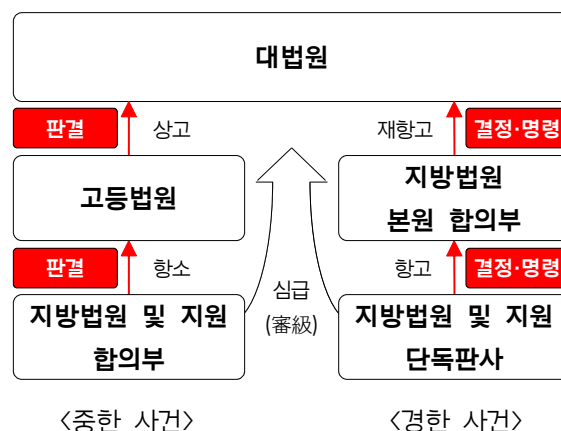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	<table border="1"> <tr> <td>신분</td><td> • 법관의 자격(법률) • 법관의 임기(헌법) • 인사과정 독립 </td></tr> <tr> <td>재판</td><td>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td></tr> </table>	신분	• 법관의 자격(법률) • 법관의 임기(헌법) • 인사과정 독립	재판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
신분	• 법관의 자격(법률) • 법관의 임기(헌법) • 인사과정 독립				
재판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				

법원의 조직 출제요소



심급 제도와 상소 제도 빈출

심급 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제도
상소 제도	법원의 판결·명령·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대법원	위헌, 위법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위헌법률심사제청권	선거소송 재판권	상고, 재항고심
고등법원		1심 관할권	항소, 항고심
지방법원			

- ※ 고등법원 선거소송: 2심제 / 대법원 선거소송: 단심제(중한 선거)
-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가짐.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개인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원고가 소송 제기)
형사재판	범죄의 유·무와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검사만이 소송 제기)
선거재판	선거 효력이나 당선 유·무효를 다루는 재판(단심, 2심제)
행정재판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재판
군사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 ※ 선거법 위반은 선거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다룸.

MEMO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지위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공권력 행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헌법, 기본권보장기관)
구성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지명한 3인 → 대통령이 9인 임명, 이 중 한 명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으로 임명
결정 정족수	헌법 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헌법재판소의 권한 변출

㉠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청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헌재에서 기각(각하)되는 경우 청구

※ 위헌법률을 적용한 재판 외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위헌법률심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청구

※ 법원은 직권 또는 개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 탄핵심판: 탄핵소추를 거쳐 인용된 경우 파면, 각하·기각된 경우 직무 복귀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요건	○	○	×
이유	○	×	

종류			내용
위헌법률심판	법원	제청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심판	국민	청구	공권력 (부)작위, 위헌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 구제
탄핵심판	국회	소추	국회의 탄핵소추로 공무원의 파면 여부 결정
정당해산심판	정부	제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성 바탕 해산 결정
권한쟁의심판	기관	청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 심판

※ 권한쟁의심판은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 그 외 4가지는 6인 이상 찬성으로 인용됨.

MEMO

개인생활과 법

i

민법의
기초



민법의 의미와 기본원칙

민법의 의미

㉠ 법의 분류

ㄱ. 국내법과 국제법의 분류

국내법	공법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사법	민법, 상법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등
국제법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VI)에서 다룸.	

ㄴ. 공법과 사법의 분류

공법	사법
국가와 개인 간, 국가 기관 간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과 개인 간 대등하고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경찰의 음주 단속, 국세청의 과세 등	개인의 주택 매매, 혼인 등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민법, 상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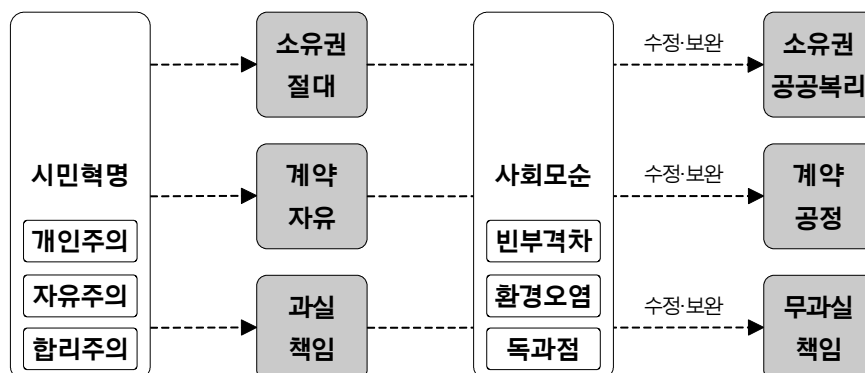
㉢ 민법의 의미

ㄱ. 민법: 재산 또는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

ㄴ. 민법의 구조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민법 전반의 원칙	[재산 관계]	[가족 관계]
	계약의 의미와 과정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부동산 거래	혼인, 이혼, 입양 유언, 상속

민법의 기본원칙 출제요소



㉓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소유권 절대(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국가 개입 ×)
계약 자유(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 형성 가능
과실 책임(자기 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

㉔ 근대 민법 원칙의 수정 및 보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개인의 재산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함.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정해야 함.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 없이 피해를 주는 경우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제조물, 공작물의 소유자, 환경 침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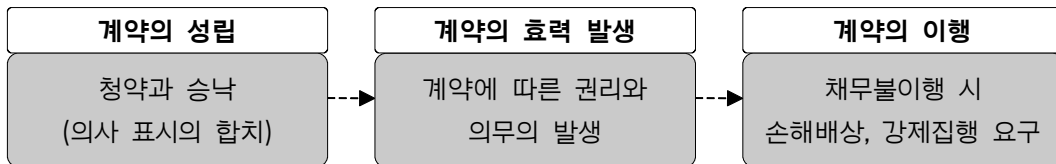
MEMO



계약의 이해

계약의 이해 출제요소

- ㉠ 계약의 의미: 사람 간에 체결되는 법률적인 합의 또는 약속
- ㉡ 계약 체결 과정



계약서 작성 출제요소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함. (계약서 필수 ×)
계약서 용도	-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 (내용, 당사자, 일시 등)
공증(공정 증서)	-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함. - 분쟁 시 유력한 증거 -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 이행 가능 (단, 공증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 기재 시)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출제요소

- ㉠ 계약의 내용: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음.
- ㉡ 계약 당사자

의사능력	- 의미: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 정상적인 의사판단의 능력 - 의사 무능력자: 만취자, 정신병자, 어린이 -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임.
행위능력	- 의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제한 능력자 제도; 행위능력 제한자의 유형을 객관적으로 규정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 제한 능력자의 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단독으로 행위 시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 가능

㉢ 무효와 취소

구분	무효	취소
의미	당연히 효력 없음, 행위 시에도,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 없음.	특정인의 주장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정지. 일단은 유효, 일정 기간 후 유효 확정
예시	혼수상태에서의 계약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와의 계약 빈출

㉠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미성년자	• 의미: 19세 미만의 자 • 제한 능력자 •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 가능 (일단 유효, 취소 시 현존한도 내 상환책임)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채무 변제, 부담 없는 증여 등) •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 재산의 처분(용돈 등)

※ 앞으로 표기되는 모든 연령은 만 나이로 간주함.

㉡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 보호

확답을 촉구할 권리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의 확인을 요구
철회권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의사 철회 가능 (단, 계약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불가능)
취소권 행사 제한	성인인 것처럼 거짓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상대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함.

MEMO

개인생활과 법

ii

불법행위와 권리구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불법행위

- ㉠ 불법행위의 의미: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가해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위법성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범죄에서는 구별이 중요)
손해 발생	가해자의 행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 발생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책임능력	자신의 행위가 위법 행위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지하는 능력

손해배상 출제요소

의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보전
원칙	• 금전 배상: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음. •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
후유증 발생의 경우	• 합의 후 재청구 불가한 것이 원칙 •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특수불법행위 변칙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감독을 성실히 했음을 입증하면 면책(과실 책임) - cf)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사용자가 사무 감독을 성실히 했음을 입증하면 면책(과실 책임)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1차적 책임: 점유자(과실 책임) • 점유자가 무과실을 입증한 경우 소유자 책임(무과실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	•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점유자가 감독을 성실히 했음을 입증하면 면책(과실 책임)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는 가해자 중 1인이나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MEMO

개인생활과 법

iii

생활 속의
법



혼인과 이혼

혼인 출제요소

- ㉠ 혼인의 의미: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의사의 합치가 전제되는 일종의 계약)
 ㉡ 혼인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에 동의 - 법적 혼인 가능 연령: 18세 이상(18세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 근친혼의 금지 - 중혼의 금지
형식적 요건	혼인신고 해야 함. (법률혼주의)

㉢ 법적 효과

친족 관계 발생	새로운 가족의 형성 →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부부별산제 적용	- 부부가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따로 가짐. - 단, 소재가 분명치 않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추정
일상가사대리권	- 일상 가사에 대한 부부간의 대리권을 인정함. -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
성년의제	-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함.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음. (민법상) -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미성년으로 간주 - 혼인이 해소될지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환원되지 않음.

구분	법률혼	사실혼	동거
혼인 의사	○	○	×
혼인 신고	○	×	
법적 보호	○	△	×

※ 사실혼의 법적 효과: 일상가사대리권, 부당 파기 시 손해배상책임 등(친족 관계, 상속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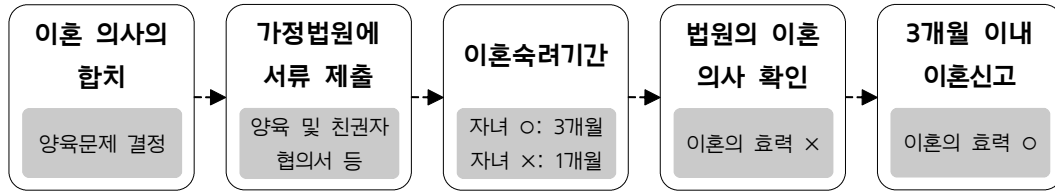
이혼 출제요소

의미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일
유형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 자연적 해소(부부 일방의 사망)

MEMO

㉠ 협의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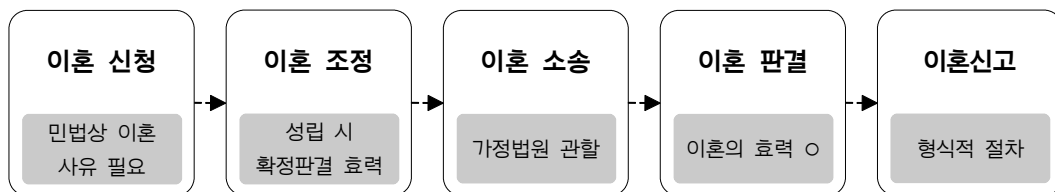
- 당사자 간 합의 전제, 사유나 동기 등을 따지지 않음.



※ 이혼숙려기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 한정됨.

㉡ 재판상 이혼

-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 이혼



㉢ 법적 효과

- ㄱ. 부부간 친족 관계 소멸
- ㄴ.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
- ㄷ.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 ㄹ.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발생

MEMO



친자 관계

친자 관계 출제요소

- ㉠ 친자 관계의 의미: 부모와 자녀 간 법률관계
- ㉡ 친생자와 양자

친생자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 → 인지를 거쳐야 함.	- 친생자의 지위 - 친생 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 관계 유지 - 성과 본 유지	- 혼인 중 출생자 간주 - 친생 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 관계 종료 - 양친의 성과 본

친권

의미	-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 소멸
내용	- 자녀의 보호와 양육과 권리의 의무, 거소 지정권, 징계권 -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동의 및 대리권
행사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 - 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 지정 - 협약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지명 -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 행사 - 친권 남용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친권 상실 선고 가능

MEMO



유언과 상속

상속 빈출

㉠ 상속의 의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 상속의 유형

법정 상속	유언 상속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 × • 동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공동 상속 •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공동 상속, 없을 경우 단독 상속 •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 상속받고, 배우자는 50%를 가산함.	•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요식주의) • 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 발생하며 생전 유언의 내용은 변경 및 취소 가능(최후의 유언만 고려함)
• 상속 순위 [1순위]: 배우자 + 직계 비속 [2순위]: 배우자 +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유류분 제도 [배우자 & 직계 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 존속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없을 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상속인의 지위 포기

MEMO

사회생활과 법

i

형법 및
범죄와 형벌



형법의 의미와 기능

형법의 의미

㉠ 형식적 의미: '형법'으로 명명된 법

사례로보기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질적 의미: 범죄, 형벌, 형사 제재를 정한 모든 법

사례로보기

선거 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의 기능 출제요소

보호적 기능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방지하여 일반 국민을 보호함.
보장적 기능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함.

형벌 부과 효과

응보적 효과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
범죄 예방 효과	일반 예방 일반 국민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
	특별 예방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효과

MEMO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출제요소

- ㉠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빈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이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해야 함.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징역에 처함'이라고 규정할 수 없음.
적정성의 원칙	-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대서는 안 됨.
소급효 금지의 원칙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함.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됨.

사례로보기

축산물 가공 처리법은 소, 말, 양 등을 도축하기에 앞서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장 설치 허가 없이 염소를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염소도 양과 마찬가지로이므로 도축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검찰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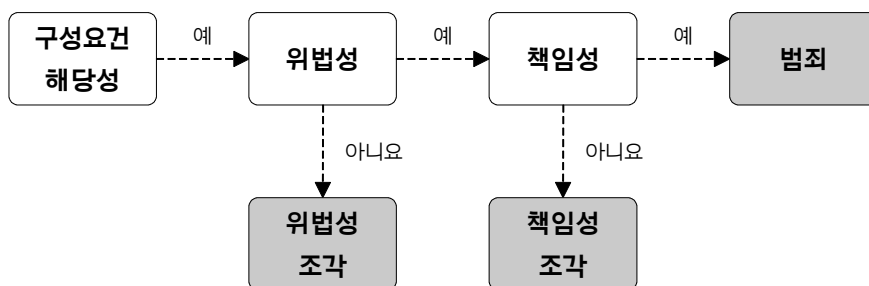
MEMO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의미와 성립 빈출

- ㉠ 범죄의 의미: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 ㉡ 범죄의 성립



위법성 조각 사유 빈출

정당행위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구행위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아래 행해진 법익 훼손 행위로 법률에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행위

책임성 조각 및 감경 사유 빈출

책임성 조각 사유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심신상실자의 행위,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책임성 감경 사유	심신미약자, 청각과 언어 기능을 상실한 자의 행위(범죄 성립)

MEMO



형사 제재

형벌 출제요소

의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			
종류	생명형	사형			
	자유형	구분	징역	금고	구류
		수감 기간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1일 이상 30일 미만
		정역 여부	정역 부과 ○	정역 부과 ×	정역 부과 ×
	명예형	- 공직취임권, 선거권 등을 박탈하거나 일시적 정지(자격상실·정지) - 자격상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되면 그 효력으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됨.			
	재산형	- 벌금: 5만 원 이상 -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 몰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며 다른 형벌에 부가함.			

※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음.

보안처분 출제요소

의미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질서유지를 위한 대안적 형사 제재
종류	보호관찰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 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
	치료감호	정신 장애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 감호소에 수용됨.
	수강명령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함.
	사회봉사 명령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의무를 부과함.

※ 보안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음.

MEMO

사회생활과 법

ii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형사 절차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에 부과되는 형벌을 규정함.
형사소송법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사, 공판,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함.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출제요소

민사재판		형사재판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고	원고	공소를 제기한 사람
원고의 주장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	피고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원고나 피고의 편에서 재판을 돕는 사람	변호사	변호인	피고인의 편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사	판사	판결을 내리는 사람

※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항상 검사임.

형사 절차의 흐름 빈출

수사	기소	공판	선고	집행
- 피의자 신분 - 불구속 수사 원칙 - 구속 전 구속영장실질 심사, 구속 후 구속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 가능		- 피고인 신분 - 구속 기소 시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 가능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

㉠ 수사 절차

ㄱ. 수사: 범죄 발생 또는 의심 시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ㄴ. 구체적 절차

수사 개시	고소, 고발, 인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자수 등에 의해 수사를 개시	
	고소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고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수사	- 수사 기관: 검사와 사법경찰 - 수사의 대상: 피의자 - 수사의 원칙: 불구속 수사,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체포·구속 가능	
검찰 송치	사법경찰이 수사 기록,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는 과정	
수사 종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종결	

㉞ 기소

기소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불기소	• 객관적 '혐의없음' 또는 위법성, 책임성 조각으로 '죄가 안 됨' • 공소시효 만료 •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㉟ 형사재판 절차

재판부 구성	• 경한 사건: 단독판사(1인) / 중한 사건: 합의부(3인) • 형사재판의 당사자: 검사(원고), 피고인
심리	• 공개 재판의 원칙: 심리와 판결 공개 •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모두 절차 •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 피고인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 사실 심리 절차 •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 검사의 의견 진술(구형) •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선고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하면 무죄, 그렇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함.

㊱ 선고

ㄱ. 선고의 종류

무죄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고함.			
유죄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심증이 충분한 경우 선고함.			
	구분	실형	집행 유예	선고 유예
	선고	○	○	×
	집행	○	×	×

ㄴ.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선고 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며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 선고 자체를 미룸.
유예 기간 동안 여타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MEMO

㉔ 형의 선고 이후 절차

형의 집행	-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이 집행됨. - 가석방 제도: 수형자가 복역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을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해당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	
형 선고에 대한 불복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할 수 있음.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 2심 재판 청구(1심 판결로부터 7일 이내)
	상고	2심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 3심 재판 청구(2심 판결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그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는 제도	

※ 무죄 판결 확정 이후 유죄의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구하는 재심은 청구 불가능함.

MEMO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빈출

적법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적법한 절차와 권리에 근거해야 함. -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함. - 유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 기관에 있음. -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진술 거부권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 방어할 수 있도록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국선 변호인 제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충족되는지 판단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구속적부심사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보석제도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체포·구속 시 그 이유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피해자의 권리 보호 빈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가해자가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함.
배상명령제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도 민사상 손해 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
형사보상제도	구속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속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확정으로 형을 집행한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함.
명예회복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검찰에 청구할 수 있음.



소년사건과 국민 참여 재판

소년사건 빈출

㉠ 형법 및 소년법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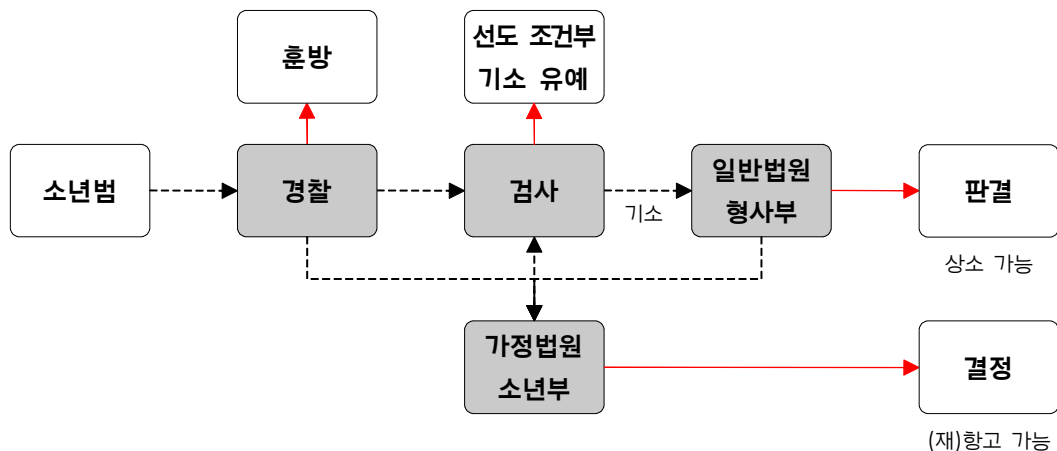
ㄱ. 형법: 14세 이상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ㄴ. 소년법: 소년사건의 대상(10세~18세)은 처벌보단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

㉡ 범법·촉법·범죄소년

구분	연령	형벌 부과	보호처분 부과
범법소년	10세 미만	불가능	불가능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불가능	가능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능	가능

㉢ 소년사건의 처리



경찰서장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또는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음.
검사	- 처분 전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등에게 소년의品行, 경력,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결정 전 조사 제도) -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 -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받도록 함. - 선도 위원회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범죄소년에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음.
일반법원 형사부	기소된 소년범에게 보호처분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음.
가정법원 소년부	이송된 소년범에게 형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응하는 검사에게 이송할 수 있음.

국민 참여 재판 출제요소

의미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개최 요건	피고인의 신청으로 형사 1심(지원 합의부)에 한하여
참여 자격	•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제외
배심원 역할	• 평의에 참여하여 유·무죄 논의 • 유죄로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절한 형벌 토의 •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의의	•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함. •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 사법의 민주화

MEMO

사회생활과 법

iii

사회법의
이해



사회법

사회법의 등장 출제요소

근대 시민법	[사회적 모순] → 자본가의 횡포	사회법 대두
• 개인주의, 자유주의 • 형식적 평등		• 국가의 적극적 개입 •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
사법 영역 절대 존중		사법 영역에 대한 공법적 규제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출제요소

사회법의 의미	사법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법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법
사회법의 종류	•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MEMO

노동자의 권리 보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조건·기준 등을 규정하여 부당하고 규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 3권을 규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규제

근로계약 체결 빈출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주 일(또는 매일 단위)
6. 임금: ~ 어쨌든 최저시급 미만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내용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 조항은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임.

㉠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	- 통화 형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 - 임금의 계산,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결정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기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근로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 1주 12시간 이내 - 휴식시간: 근로 4시간(30분 이상) / 8시간(1시간 이상) - 유급휴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보장

㉢ 연소근로자 보호

연소근로자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함. -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할 수 없음. - 단, 13~14세인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닐 경우 근로할 수 있음.
연소근로자 보호	- 근로계약 체결: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함. - 임금은 연소근로자가 단독으로 청구함. -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5시간 이내 - 휴일·야간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가능함.

근로 3권 빈출

단결권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 (파업, 태업)를 할 수 있는 권리 -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 - 부당한 목적, 폭력 사용: 위법

부당해고 빈출

㉠ 정당한 해고의 조건: 다음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는 것

요건	- 정당한 사유 - 불가피한 경우 - 합리적,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절차	30일 전 해고 계획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 지급 -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부당해고의 성립: 위 요건과 절차를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시로보기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엄마인 갑은 얼마 전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 회사로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는 이미 다른 직원을 채용했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며 해고를 통보하였다.

부당노동행위 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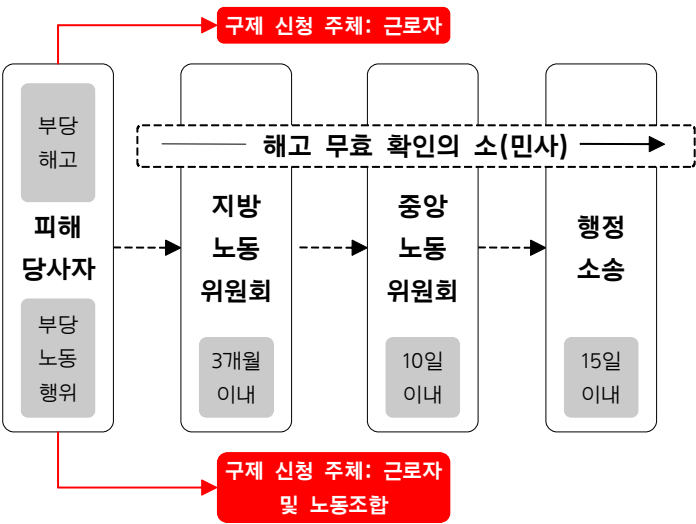
-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예시로보기

을은 A 회사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사 후 을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A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을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주문했다.

MEMO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빈출



구제 신청 주체	부당해고	근로자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노동조합
지방노동위원회		불이익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 시 15일 이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단계로 심급)
해고 무효 확인의 소 (민사소송)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와 별개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제기 가능

MEMO